주요 보험 동향 자료

2022.12.12

각 보고서의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보도 자료

보험회사의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 시행 예정

금융감독원 | 2022.12.05

2023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 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신지급여력제도: K-ICS)이 이루어짐. 그간, 금융감독원은 국제 자본규제와 부합하도록 신지급여력제도를 마련하였으며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를 시행할 예정임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232종을 폐지·간소화하고, 보험상품 평균공시이율 발표시기를 1개월 앞당겨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 2022.12.06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 가운데 활용도가 낮은 보고서를 폐지하고, 자료요구 관행을 개선함. 아울러, 보험상품 개발 등에 활용되는 평균공시이율을 조기 제공하고, 표준약관 등 개선사항을 특정 시점에 일괄 시행하여 보험회사가 효율적으로 보험상품 개발, 개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구기관장 간담회 개최

- '23년 대내외 금융,경제 및 리스크요인 전망 논의 -

금융감독원 | 2022.12.0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월 7일(수) 연구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23년 대내외 금융시장,경제 전망 및 주요 리스크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음. 간담회 참석자들은 주요국 통화 긴축에 따른 고금리 상황이 점진적이지만 길어질 수 있다고 예상하며 국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금융산업의 손실위험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함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 2022.12.08

보건복지부는 12월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광범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의료접근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과잉진료 등을 유발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감사 결과, 건강보험 급여 항목 확대 이후 적정 규모 대비 과다 보상, 지출관리 미흡, 과잉진료 유발 등의 문제점을 확인함. 향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임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 2022.12.01

2022년 3월말 기준 가구 평균자산은 5억 4,772만 원, 부채는 9,170만 원으로 순자산 4억 5,602만 원이며, 2021년 가구당 평균소득은 6,414만 원, 처분가능소득은 5,229만 원임. 2021년 균등화 처분가능소득기준 지니계수는 전년대비 증가, 소득 5분위배율은 전년대비 증가, 상대적 빈곤율은 전년대비 감소함

2021년 생명표 작성 결과

통계청 | 2022.12.06

2021년 출생아의 기대수명은 남녀 전체 83.6년, 남자 80.6년, 여자 86.6년으로 전년 대비 남녀전체 0.1년, 남자 0.1년, 여자 0.1년 증가함. 2021년 60세 남자는 향후 23.5년, 여자는 28.4년 더 생존할 것으로 예상됨. OECD 회원국 간 기대수명 비교 시 우리나라 남자는 2.9년, 여자는 3.5년 높음. 2021년 출생아가 주요 사인으로 사망할 확률은 암 20.1%, 심장질환 11.0%, 폐렴 8.8% 순임

2022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 2022.12.07

'21년 1인가구는 전체 가구의 33.4%인 716만 6천 가구이고, 연령대별 비중은 29세 이하 19.8%, 70세 이상 18.1%, 30대 17.1%, 60대 16.4% 순임.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에는 20.0%였으나, 2030년 35.6%, 2050년 39.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1년 1인가구의 연간소득은 2,69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였으며, 전체 가구(6,414만 원)의 42.0% 수준임. '21년 1인가구의 월평균 보건지출은 12만 3천 원으로 전체 가구(22만 6천 원)대비 54.4% 수준임

입법 자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 2022.11.29

현행법은 교육 · 고용 · 시설이용에 있어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임. 이에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1인 | 2022.11.30

사고 시 수리 기간 동안 제공되는 렌터카의 대차는 동급을 기준으로 함. 하지만 보험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체 대차료를 책정한 뒤 이를 강제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대여 요금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바, 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2022.12.07

요양기관의 체납 보험료 납부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채권의 양도, 추심 및 전부명령 등이 있는 경우 체납보험료 등에 대한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 처분 및 은닉 등 사해행위 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함